

시론



천세진 문화비평가·시인

매칠 전 종이책을 다른 전달 매체 형식으로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있었는데 AI의 창작 활동에 관한 이야기도 오갔다. AI의 창작 활동이 다양한 예술 영역에서 이뤄지며 불가침 논란이 최근의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20여 년 전에 실리컨밸리에서 문학, 미술, 음악, 의학 진단, 법조 판결 등에 대한 유의미한 실험들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며 논란이 시작됐다.

당시에는 비용이 너무 비쌌고 실험적이었던 것, 불과 몇만 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용화가 불과 몇 년 전에 폭발적으로 이뤄졌을 뿐이다. 당연히 작가들 입국에서는 당시에 이미 현재의 문화적 현상을 예견하고 우려했다. 대체할 뾰족한 방안이 없으리라는 예측도 함께 있었던 것 같다.

예술은 인류 역사 내내 '결핍'과 '희소' 세계였다. 최근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에서 발견된 약 6만7천년 전의 동굴 벽화는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기록'과 '상징'이라는 예술적 행위를 갈구했음을 증명한다. 술라웨시 벽화부터 르네상스를 거쳐 예술적 폭발 직전의 인상주의에 이르기까지, 예술 세계는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생

희소와 범람

을 바쳐야 하는 시간, 선택받은 재능에 의해 유지되는 한정된 생산의 세계였다.

작품을 즐길 수 있는 대중도 규모가 작았고, 대중은 예술작품을 접하기 위해 물리적 공간을 찾아가야만 했다. 그러나 21세기 복제 기술 상용화 시기를 지나 생성형 AI의 시대에 접어들며, 인류는 유례없는 예술의 '과잉' 상태에 직면해 있다. 예술은 더는 '희소성의 세계'로 상징되지 않는다. 클릭 몇 번으로 무수히 쏟아지는 '범람의 세계'로 상징이 변하고 있다.

20세기 이전에는 기술적 숙련도가 예술성을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화가의 정교한 붓질, 연주자의 숙련된 기교, 문학가의 방대한 어휘력이 예술성의 척도였다. AI는 그런 필요조건을 무력화했다. 이제 인간의 역할은 예술 창조자의 역할에 큐레이터 역할이 더해졌지만, 창조자보다는 큐레이터 역할이 더 비중을 차지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그걸 지평의 확대라 볼 것인가, 본질적 변질라 볼 것인가가 문제다.

예술의 범람은 역사적으로 인간만이 가진 '불완전함'의 가치를 재조명한다. AI는 오류가 적은 매끈한 결과물을 내놓지만, 인간의 예술은 주관적인 고뇌와 신체적 한계, 태생의 연원이 가지는 문화적 한계, 예상치 못한 실수 등의 조합에서 탄생한다. 인간의 예술 작품에 대한 스토리텔링은 과정을 조명하지 결과물을 조명하지 않는다.

창작의 과정에서 겪는 고통, 희열, 자기 성찰의 시간은 AI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실존적 체험이다. 예술성은 완벽한 마침표를 찍는 능력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통

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와 관점을 형성하는 과정을 살피는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

예술가와 비평가의 역할은 더 어려워졌다. 숙련 과정을 거치지 않은 대중이 AI를 이용해 무분별하게 쏟아내는 예술적 산물들을 살펴며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진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고양하는 작품인지를 더 예리한 심미안을 발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술은 실패와 결여를 전제하고 출발하고 실패와 결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끝난다. 완벽으로 마무리하려는 게 아니고, 실패와 결여가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걸 미학적으로 마무리하려는 것이다. 그것이 예술가가 적고 작가가 제한적으로 탄생하는 이유다. AI를 이용한 예술품은 그런 예술 정신을 전복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예술은 희소성에 머물러야 한다. 범람해서는 안 된다. 범람 속에서는 놀라운 수명 능력이 아니고서는 살아남지 못한다. 역사할 뿐이다.

AI 예술은 결국은 인간을 배제한다. 직접성과 희소성을 잃었는데도, 기술지상주의자들은 AI가 만든 것을 예술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부를 수는 있다. 하지만 인간의 예술은 아니다. 기계의 예술이고, 무생물의 예술이다. 생명의 존재는 그런 예술을 하지 않는다.

인간의 존재 이유는 개별성에 있다. 양적 증가는 개별성을 파괴한다. 알고리즘은 힘이 있다. 인간의 문화도 알고리즘 덩어리다. 그 덩어리는 개별성과 시간으로 만든 것이다. 덩어리가 되더라도 긴 시간에 이뤄지면 된다. 60년쯤이면, 클릭 몇 번으로 만들어진 것, 그건 인간의 예술품이 아니다.

社說

전남권 국립의대 소재지 결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전남권 최대 현안인 국립의과대학 신설 문제가 단단히 꼬였다. 목포대와 순천대가 2027년 통합대학교 출범을 목표로 실무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소재지 결정이 쉽지 않다. 순천대는 합의 도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면서 상이한 의료 수요를 고려한 이원화된 교육 체계와 권역별 병원 설립을 정부에 요청했다. 서부권은 의대 설립 결정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다며 강력 반발한다.

두 대학은 지난해 말 전남도와 3자 업무협약을 통해 대학본부와 의대를 분리 배치하기로 했으나 교육부가 통합 신청서에 '본부 위치' 명시를 요구하면서 서로 의대를 쟁기려는 듯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격화됐다. 6·3 지방선거와 맞물린 정치권 개입으로 분란만 키운 꼴이다. 향후 해법 찾기도 미지수다. 2030년 100명 정원의 의대 설치가 가시화됐고, 전남도와 대학은 내년 3월 개교 일정을 제시해왔는데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있어서다.

이대로면 명문대자 약화될 게 뻔하다. 목포대·순천대가 속의를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문에서 최우선 의제로 삼아 의예과·의학과의 분산 배치, 2개 이상 부속병원 확보, 기존 공공병원과의 연계 활용 등 지역 집중 방식이 아닌 동·서부 상생형 모델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미 타 대학들은 의예과와 의학과를 나눠 운영하거나 복수 부속병원을 신설하고 기존 공공병원을 활용하고 있다며 타당성을 들었다.

애초부터 난제였다. 대학 간 논의도 실종됐고, 정치 공방으로 더욱 일그러졌다. 지금으로선 양측의 협의 자체가 무의미하다. 진전될까 만무하다. 되레 상호 불신만 쌓여가는 형국이다. 농어촌·섬 등 의료 취약지에서 배치되는 공중보건 의사가 해마다 줄더니,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이같은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 예측이 나온다. 심각해지는 고령화 속 진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정치적 계산이나 지역 내 소모적인 힘겨루기로 허송세월해선 안 된다. 중앙정부와 전남도, 추후로 전남광주특별시가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안타까운 시간만 흐르고 있다. 근본적인 해법을 내야 한다. 전남권 주민이 어디서든 안심하고 치료받을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논란 접고 정부가 챙겨야 여수섬박람회 준비 힘실려

정부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진도모자를 찾아 기반시설 구축 현황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불과 일주일만의 재방문이다. 김 총리는 행사장 조성 및 전·운영, 안전관리 체계 등 현안을 보고받고 관계부처와 협력 방안 등에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전남도는 일반인 여객선 운임 50% 국비 지원, KTX 전라선 증편과 여수공항 부정기 국제선 운항 등 특별수송대책 마련을 적극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국민적 관심이 한층 높아진데 감사를 전했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공사 진행과 교통·편의시설, 안전 대책 등을 직접 점검한 바 있다.

섬의 가치를 널리 알리며 섬의 미래 가능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다. 중앙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기여할 수 있다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인프라 조성 및 홍보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점인데 현장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필요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얼

마 남지 않았다. 정부 차원에서 챙기는 모습이 다. 국민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전남도의 건의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행사장 적정성 문제 또한 서둘러 매듭지었으면 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해양 축제로 꼭 성공시켜야 한다. 더구나 전남광주 통합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메가 이벤트다. 주행사장 준비 미흡, 간접직 임시시설 논란 등에 언제까지 발목을 잡혀있을 수 없다.

전남도, 여수시, 조지위원회가 정부와 유기적으로 협업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현재 전체 공동물은 60% 수준이다. 7월까지 주요 시설 조성을 마무리한 뒤 8월 사전점검에 들어가는 일정에 맞춰 진척해야 한다. 지금까지 27개 국가, 3개 국제기구의 참가가 확정됐으며 총 300만명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하고 있다. 단순한 지역 행사를 넘어선다. 무한 자원인 섬을 국가 전략으로 끌어올리고 세계와 공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손님맞이에 보다 세밀하게 대비해야 한다.

자치칼럼



이용연 한국마을자치연구소 대표

지난 3월31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때 삭제됐던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5년3개월 만에 되살아났다. 작년 겨울 94일 동안 국회 정문 앞 1인 시위를 이어오는 등 지난 5년 동안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전국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이 줄기차게 추진해 온 입법 노력의 마침내 열매를 맺어 다행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이재명정부의 국민주권과 자치분권을 지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7월 들어선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시민주권정부로 거듭나는 데 큰 기둥이 될 것이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더욱 그렇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종전의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서 지방자치법 17조의 주민권리 조항으로 옮겨와 규정했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2013년 이명박정부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만든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지방자치법 개정, 주민자치 혁신의 기회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는 읍면동에 주민자치회의 시범 설치를 처음 규정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2013년부터 전국 31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시범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추진했으나, 2015년 18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고 중단했다.

이후 문재인정부 들어 다시 주민자치회 설치가 확대됐으나 윤석열정부의 민주주의 퇴행과 함께 멈춰섰다. 중앙정부의 중단과는 달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민자치회 설치와 전환이 꾸준히 추진됐다. 특히 광주시는 2015년 광주형 주민자치회 사업을 시작해 전국에서는 최초로 2024년까지 96개 전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 완료, 전국적 모범 사례로 관심을 받았다. 이재명정부는 주민주권 지방정부 11개 정책과제를 정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주민자치 실질화를 첫 번째 과제로 선정해 전문가와 마을활동가, 주민단체와 손잡고 입법을 강력히 추진해 완성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17조 주민의 권리 부분에 주민자치회의 설치를 규정, 주민들이 정책참여 권리를 주민자치회를 통해 더욱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해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거버넌스를 확장토록 했다. 아울러 자치계획의 수립과 주민총회, 마을공동체 활동의 추진 지원의 근거를 두고, 주민자치위원의 권한 남용 금지, 정치적 중립 의무,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이용

과 사적 편향 금지를 규정해 주민자치회가 오직 지역사회의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간의 연대와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의 자치회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자치회가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자치법의 이러한 규정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를 확대해 풀뿌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주민과 마을에 대한 공적 책무를 다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자치회 설치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 정권에 따라 활동이 중단되고,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휘둘러왔던 잘못된 관행을 방지한 것이다.

이번 지방자치법의 주민자치회 입법화로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달라져야 한다. 법에 규정된 대로 사적이익이나 편향, 권위 의식에서 환골탈태해 혁신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 오로지 마을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헌신하도록 자세를 가다듬고, 자치단체장이 나 정치권에서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유혹을 단호하게 떨쳐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난 20년 동안의 주민자치회 운영 경험을 엄밀하게 평가해 잘못된 제도와 관행은 바로잡도록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를 혁신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취재수첩



정해선 지역특집부 국장

오는 6·3지방선거 목포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선거 공신'으로 불리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시정 개입 우려가 다시금 고개를 들며 지역사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과거 시정 개입 논란에 연루됐던 인사들과 퇴직 공무원들이 일부 후보 캠프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목포시정 흔드는 '선거 공신' 그림자 권력

선거 이후 이들이 인사와 계약, 정책 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림자 권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단순한 기우를 넘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시민사회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다. 한 시민단체 대표는 최근 SNS를 통해 "퇴직 공직자 카르텔의 보이지 않는 손은 가장 위험한 내부 권력"이라고 일갈했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캠프 합류와 눈공증상 구조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고질적 병폐로 지목된다.

민선 3기 이후 고착화된 이러한 구태는 공직사회를 '줄 서기'와 '총성 경쟁'으로 내몰며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려 왔

다. 능력과 원칙은 설 자리를 잃고 정책 결정은 특정 세력의 입맛에 맞게 왜곡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시장 후보들은 구태 정치와 단절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 동시에 무분별한 시정 개입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인사 검증 강화,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 실질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권자인 20만 목포 시민의 냉정한 감시와 심판이다.

시정의 진짜 주인은 어둠 속의 '그림자 권력'이 아니라 시민 자신임을 이번 지방선거 투표를 통해 명확히 증명해야 할 시점이다.

월요시화 月曜詩話

「과문」 - 김영춘

누가 물결을 올린 것인가  
밀어낸 것인가  
머뭇머뭇 퍼져나간다  
깊고 그윽한 곳까지 간다  
무엇이 다가와서 네 마음을 만진 것인가  
밀어보낸 것인가  
울먹이듯 떨리며 퍼져나간다  
누구에게나 가서  
사람의 무엇인가가 된다  
- 출처: 『너는 왜 가끔사가 되느냐』, 달, 2026.

\*울린 것이구나. 과문의 끝은 울음이 마침 내 닿은 곳이다. 과문이 닿은 곳의 누군가는 귀를 열어 울음이 안으로 흘러들도록 해주어야 하는구나.  
밀어낸 것이구나. 과문의 끝은 너는 밀리지 않으려고 악물고 버틴 것이구나. 과문이 닿은

곳의 누군가는 밀려 사라지지 않으려는 처절의 변방 끝에 있는 것이니 내쫓지 말고 온몸으로 받아주어야 하는구나.  
한 몸의 과문은 작은 웅덩이에 불과하다고, 과문이 일어봐야 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다. 파문이 깊고 그윽해지니 웅덩이가 되고 만 것을, 울음을 받아주느라 깊어지고 처절을 받아주느라 그윽해진 것을 알지 못했다.  
그 많은 주름이 파문을 받아주느라 생긴 것일 테니, 몸 가득 깊은 파문을 지닌 사람을 만나면, 파문을 받아준 사람이라고만 부르지 않고 사람이 깊은 사람이라고 불려야 하겠다.  
웅덩이 앞에 앉아 손가락을 넣는 사람이 있다. 작은 파문이 있다. 파문을 받아주는 파문의 끝에 그윽한 사람이 있다.  
(천세진 시인·비평가/월간 <초록의자> 주간)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부회장 馬濼皓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입문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 무 국	650-202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